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입주민 갈등 폭주

전국 곳곳서 지하주차장 출입금지 여부 놓고 먹살잡이 등 갈등 이어져

지난주 인천의 아파트 단지 전기차 화재 이후,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인천 청라아파트 전소된 자동차들

인천 전기차 화재 사고는 주차된 차들은 물론 전장에 설치된 배관 파이프가 녹아내리면서 단전. 단수가 발생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임시 주거시설과 모텔 등을 전전하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누구나 단 한번의 화재로 파산에 직면하게 되는 공포가 전 국민에게 확산되고 있다.

이런 엄청난 화재 사고에 불안한 아파트 입주민들은 전기자동차의 출입금지 여부를 놓고 먹살잡이를 하는 등 이웃 간에 극심한 갈등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처참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전기자동차의 위험성을 도외시 하고, 세금을 털어서 보조금까지 주면서까지 사태를 확산시켰는지 국회는 책임 있는 부서 및 해당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국정조사라도 단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송승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이 소방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총 161건에 달한다. 2017년 1건 정도였던 발생건수는 2021년 10건, 2023년 34건으로 급증한 추세이다.

전기차 화재의 특성은 열 폭탄 현상과 주차중 발화, 일반적 소화가 불가능한 리튬 배터리가 그 핵심이라고 한다. 이로 인해 전국민적인 포비아가 형성되는 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화재 사고를 보면 정상인이면 누구나 전기자동차는 아직 상용화 되어선 안되겠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위험한 물건인데 통상부, 환경부 등 고위직 공무원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전기차 보급 확산을 강력히 밀어 부치는지 의문이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편, 전주시 관계자에 의하면 전기차 보조금은 환경부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2011년에 보급이 시작됐고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2024년 전주시 현 지급액은 71억 정도라고 한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전용주차구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시공문에 의해서 100세대 이상, 주차 50대수의 경우 22년 1월 27일 부터 25년 1월 27일 까지 설치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고 한다. 8월 현재 약 2900곳 정도가 달성 상태로 약71% 진도율이라고 한다.

이와같은 충전시설 설치 의무화는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전기차를 안전에 대한 아무 대책없이 단지 환경차라는 이유만으로 입주민들을 사지로 내몬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전국 각지에서 입주민간 갈등이 끊임 없이 일고 있다.

도내에서도 생활 지하 주차장 내 전기차 화재 불이 이어지자, 지난 6월 5일 각 시군에 '지하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 요청 협조 공문을 보내는 한편, 공동주택 중 화재 안전시설 수요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비록 늦었으나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제조사들이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은 물론이고, 중앙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도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분노섞인 질타가 곳곳에서 일고 있다. /김욱기 기자



우범기 전주시장은 8일 '2024년 상반기 시내·마을버스 친절 안전기사'로 선정된 구정희 씨 등 10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친절 안전기사 10명 시장 표창

전주시, 상반기 시내·마을버스 친절 안전기사에 수여

우범기 전주시장은 8일 '2024년 상반기 시내·마을버스 친절 안전 기사'로 선정된 구정희 씨(성진여객) 등 10명에게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평소 안전한 버스 운행과 친절한 고객 응대로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을 높여온 2024년 상반기 시내버스·마을버스 친절 안전기사는 △구정희 △이원규(이상 성진여객) △안현문(이상 정일여객) △박찬우 △선영중(이상 제일여객) △최두성 △서재신 △양정우(이상 호남고속) 8명이 선정됐다. 또, 마을버스 친절 안전기사는 △조형인 △유건호(이상 전주시설관리공단) 2명이 선정돼 표창을 받았다.

시는 이번 친절 안전기사 선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5월까지 시

내버스 시민모니터단 평가 및 전주시 누리집 및 콜센터 등 시민 제보를 통해 1차 추천을 받았으며, 이후 후보자가 운행하는 버스 탑승 검증 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시는 선정된 운전원들에게 친절 기사 명함과 엠블럼 패치를 전달했으며, 표창 수상일로부터 5년간 전주시 공영주차장 이용 시 50%의 요금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실구문 전주시 대중교통국장은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친절 안전기사 선정을 통해 다른 운전원에게 모범이 되어 모두가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 환경을 만들고, 불편사항을 개선하여 대중교통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안전한 여름나기 위한 다양한 활동 전개

전주시 35개 동 주민센터, 자생단체와 폭염 대비 시민 지원 대책 추진

전주시민과 행정의 접점인 전주시 35개 동 주민센터가 연이은 폭염 속 시민들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돕는 거점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주시는 35개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협의회와 통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주민들의 참여로 다양한 폭염 대비 시민 지원 대책이 추진

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다수의 주민센터에는 폭염취약계층과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이 잠시 머물며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얼음물과 아이스크림 등이 담긴 냉장고를 비치하는 등 시민들의 열열질환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동서화동 주민센터는 지

난 2018년부터 올해로 7년째 주민자치 위원회와 함께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과 주민들의 여름철 찜통더위를 식혀줄 아이스크림과 생수를 제공하는 '사랑의 아이스크림 냉장고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중앙동·노송동·삼천2동·인후3동·금암1동·우야2동·송천2동 주민센터도 각 지역 자생단체와 힘을 모아 주민들의 열열질환 예방을 위해

생수와 얼음물, 아이스크림, 부채 등을 나누고 있다.

각 동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가구,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해 자생단체와 기관, 주민들의 후원을 받아 선풍기와 양산, 생필품, 여름 이불 등 폭염 대비 냉방용품과 생필품을 나누고 있다.

전주시 35개 동 주민센터는 무더위가 끝나는 오는 9월까지 각자 폭염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우수'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공단은 전국 262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에서 '나' 등급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평가 결과 90점 이상이면 최우수 등급인 '가' 등급이, 85점 이상이면 우수 등급인 '나' 등급이 부여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평가점수에 따라 '가'에서 '바'까지 5단계의 평가 등급을 매긴다.

앞서 공단은 지난해 평가에서 89.58점을 받아 지방공기업평가원으로 평가 기관이 일원화된 2016년 이후 역대 최고점수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평가에서 공단은 'ESG 경영 체계 확립'과 '시민 중심의 공단 운영',

'미래 대응능력 향상' 등 지속 가능한 공단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단은 '으씩(ESSG) 경영을 통한 지속 가능 공기업'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제로(ZERO) 투(to) 텐(TEN)을 경영 목표로 세우 ESG 경영 체계 확립을 위해 노력해왔다.

'으씩(ESSG) 경영'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본연의 역할을 고려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ESG의 비재무적 3가지 요소에 '안전(Safety)'을 더한 경영 철학이다.

공단은 시민 중심의 공단으로 거듭나기 위해 교수와 변호사, 언론인 등 각계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참여혁신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김욱기 기자

전주시, 맞춤형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프로젝트 추진

전주시가 또래와 비교해 신체적·정신적 성장이 느린 영유아를 찾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시는 영유아 발달 지연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맞춤형 발달지연 영유아 조기발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조기 발견 및 치료가 중요한 또래와 발달양상이나 행동이 다르다고 여겨지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경계선 발달 아동의 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정상적인 발달 계도로

돌아가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전문적인 검사와 상담을 통해 아동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치료 기관과의 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올해 총 1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센터장 손경화), 전주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고철영)와 협력해 200명의 영유아와 그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발달검사 및 치료 연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욱기 기자

전주 노송동 지사협,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 전달

전주시 완산구 노송동(동장 채월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전현남)는 8일 폭염 취약계층 25가구에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시원한 여름나기 물품 지원'을 통해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선풍기 15대와 여름이불 10채를 가정 방문하여 전달하고, 각 세대의 안부를 확인하였다.

전현남 위원장은 "장기간 지속되는 폭염으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여름을 나기 힘든 실정이지만, 전달해 드린 물품을 통해 조금이나마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